투데이 칼럼

북중 우호조약 60주년

정 복 규
논설위원 · 통일교육원

북·중 우호조약이 체결된 지 60주년을 맞았다. 이 조약은 상대국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전쟁에 자동 개입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서 이른바 '혈맹'을 상징하는 조약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친서를 교환하면서 대내외에 결속을 과시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중국 영화 '건당위업'에는 중국과 홍콩의 스타들이 대거 출연했다.

이 영화는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성립되기까지 파란만장한 과정을 그렸다. 북한 TV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인 지난 1일부터 중국 영화와 드라마를 잇달아 내보냈다.

양국의 밀착 과시가 최고조에 달한 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이 된 지난 11일이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친서를 교환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중국 관영 CCTV도 양국 정상의 친서 교환 소식을 메인 뉴스에서 머리기사로 다뤘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1면에 해당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시진핑 주석은 축전에서 '중조 우호조약'을 체결해서 양국 인민의 피로 맺어진 전투적 우의를 공고히 하고 양국의 지속적인 우호 합작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치 법률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0년 전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 때 양국은 서로 대표단을 보내며 성대하게 기념했다. 올해 북·중 양국은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당초 접촉했던 고위급 교류는 하지 않았다.

다만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북한 주재 리진쥔 중국 대사를 초청해 연회를 열었다. 북·중 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을 방문한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가 체결했다.

그 뒤 혈맹으로 불리는 북·중 관계는 과거 우여곡절을 겪으며 경색됐던 시절도 있었다. 1960년대부터 중국과 소련은 갈등을 시작했다.

북한으로선 어떻게든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모색했다. 중국도 소련보다 좀 더 북한에 유리한 우호적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다.

1982년 당시 덩샤오핑 주석과 후야오방 총서기가 방북해 김일성 주석의 70회 생일을 축하했다. 김주석도 여러 차례 중국을 찾았다. 김정일 시대에도 북·중 외교는 북한 외교의 중요한 축이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북한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한중 수교 당시 김정일은 〈 중국이 우리 등에 칼을 꽂았다 〉고 표현했다. 고난의 행군 때 중국에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다. 물론 중국도 지원할 의지가 없었다.

삐걱대던 북·중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중반에 더욱 악화됐다. 2012년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13시간 만에 발사 장면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중국은 결국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도 참여하게 됐다.

냉랭하던 북·중 관계는 2015년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시진핑 주석의 각별한 예우를 받았던 한국, 러시아 정상과는 달리 북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최룡해는 대열 맨 끝자리에 서 있었다.

깊어가던 북·중 갈등은 2018년을 기점으로 반전을 맞았다. 2018년 3월을 시작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이듬해까지 연달아 네 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시진핑 주석도 2019년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중 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됐다. 역시 북한도 이념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리였다.

미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한 북한은 최근 중국과 대면 외교를 재개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유엔 국제회의 보고서에서 식량난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건 이례적이다.

북한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북한의 식량 사정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고문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황 영 표
전주세무서장

이제 완연한 여름을 알리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폭우와 태풍도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형평성이 갖춰지고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기에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더라도 사업자나 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주기 단축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소득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더욱 두터워 질 것입니다.

소득자료 제출 횟수가 늘어나게 되어 생업에 여념이 없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번거로움이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제출기한 내에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하실 수 있도록 '인건비 간편 제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 설

전주시의 탄소중립 선언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탄소 중립(Carbon Neutral,炭素中立)은 탄소 제로(carbon zero) 혹은 넷 제로(net zero)라고도 부른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맞먹는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고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오염을 상쇄한다.

최근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전주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 단체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협약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와 전북은행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로 이미 협약했다.

전북은행은 이를 위해 다양한 실천 안을 내놓았다.

먼저 올해 말까지 본점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고, 은행 차량을 모두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영업점마다 태양광 시설을 갖추고,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모두 LED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계획이다.

환경 훼손을 막고 자연을 보전하려는 이른바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는 금리를 깎아준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기업은 대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전북은행은 현재 ESG(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계획을 수립해서 자금까지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여러 기관 단체와 실천 협약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탄소 중립은 지역 단위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세부적으로 많은 기업들과 단체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협약을 통해서 구체적 실천 안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를 초대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탄소 중립 교육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정도 인상된 건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노사 양측 대부분이 퇴장하는 진통 끝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올해보다 440원, 5.1% 인상됐다.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4천 원 정도다. 지난 2018년 이후 2년 연속 상승률이 10%를 넘었다가 다시 2년 연속 1~2%대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제한적 인상'인 셈이다. 코로나19 충격과 향후 경기 회복 전망을 모두 고려했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다.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제단체는 코로나19로 힘든 경영 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사의 이의 제기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한 근거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지표를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 세 개 기관의 평균치라는 것이다. 이번에 노동계는 20% 이상, 1만 원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경영계는 사실상 8700원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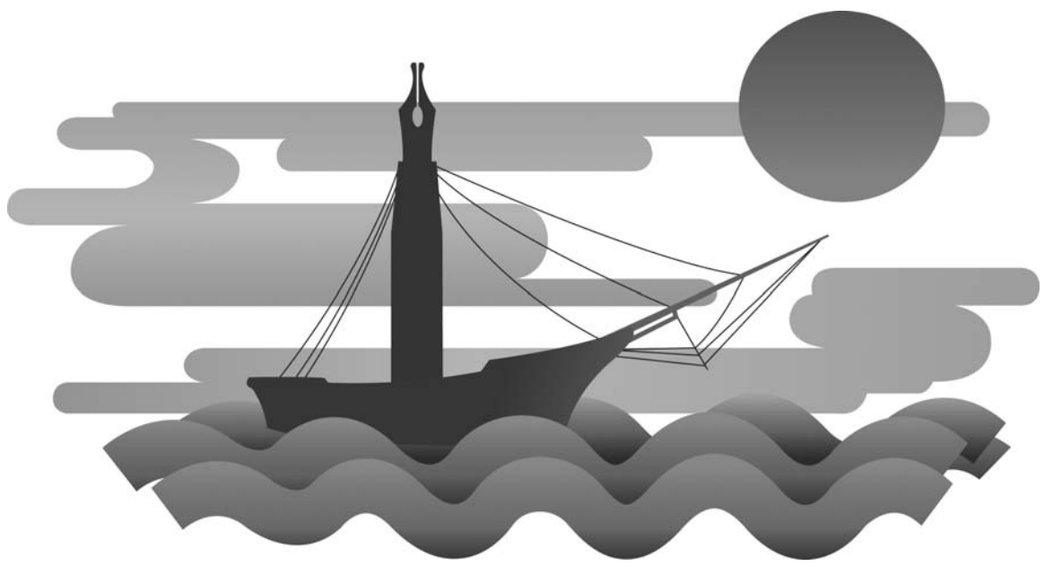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입장 차를 좁히고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해 보인다.

이번에 특히 관심이 쏠렸던 것은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내걸었던 이번 정부의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이다.

노사 어느 쪽이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큰 이변이 없다면 지금 그대로 다음 달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